

보수층 대결집·대중적 스타성·대통합 효과 '톡톡'

■ 박근혜 당선자 승리 요인

단일화 효과 못살린 민주당 전략부재도 한 몫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헤치고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보수층의 결집, 대중적 스타성, 국민대통합 및 민생 행복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승리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는 결정적 조건에서도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친노(친 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의 전략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승리'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패배'에 방점을 두고 있다. 18대 대선 승패의 요인을 조명해본다.

▷보수 진영 결집=박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으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대선 관세가 막판까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전체 유권자의 40%이상인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것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투표율이 당초 예상했던 70% 안팎을 넘어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75.8%를 기록했지만, 박 후보는 서울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도 승리의 원인 중 하나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의 지난 15년 동안에 쌓아온 대중적 스타성도 결정적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파산 공세에도 원직과 상식

을 모토로 형성된 '준비된 후보'라는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는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고(故) 육영수 여사에 대한 안타까운 이미지가 '오버 랍' 됐다는 점도 유권자들의 감성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감하게 당명을 변경하고 발 빠른 국민대통합 행보와 경제 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박 후보의 중도층 공략과 보수층 결집 전략도 이번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선거 과정에서 '아킬레스 건'으로 여겨졌던 과거사 문제를 비교적 빨리 털어내고 '민생'을 화두로 내세운 것도 중도층 공략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며 '현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내세운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 승리의 요인은 보수층의 결집과 박 후보의 발 빠른 중도층 확보 전략 등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특히, 대선 막판 초박빙 판세는 투표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결집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략 부재=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는 초대형 약제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승리를 거둔 배경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전략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선대위는 대선을 앞두고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며 지지층 결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의 모바일 투표에 대한 논란 등으로 후보 간의 화합적 결합이 제대로 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당선인 사실상 확정된 19일 밤 여의도 당사 상황실을 방문, 당직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경선 이후, 손학규 전 대표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국민적 감동 결연에 실패하면서 결정적으로 대선 승리의 계기 마련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안 전 후보가 대선 직전,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후보 단일화 직후 보인 '오라카라' 행보는 국민적 피로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민적 열망인 '새 정치'에 대한 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참여정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과 선대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친노 그룹'에 대한 눈길도 차갑다. 대선 막판, 초박빙 판세에서도 친노 그룹은 '임명직 거부 선언' 등을 통해 정권 창출에 대한 긴장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 부재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국면 등 대선의 고비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모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종북 논란을 촉발시킨 통합진보당 사태도 중도층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수위 26일째 출범

30일간 활동... 행안부, 공간·조직·예산문제 협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차기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할 임무를 갖게 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4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인수위 활동 종료 뒤엔 30일 안으로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 구성은 당선자 권한이지만, 인수위 사무실 준비 등 실무적인 작업은 정부 몫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는 가장 먼저 당선인 측을 통해 인수위 구성에 관한 준비사항과 조직, 예산문제를 협의한다.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7일 뒤에 인수위를 출범시켰

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 후 10일을 전후해 인수위를 구성했다. 따라서 이번 인수위는 크리스마스 직후인 오는 26일째 출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일단 인수위가 들어설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인수위원·비서관·기자단 등 500여명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1만㎡ 안팎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사용공간이 두 달여로 짧고 대통령 당선인이 머무는 때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후보 지로는 ▲광화문 민간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화문 민간건물은 면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수위 사무실이 통상 두 달여로 짧고 경비감화 등으로 건물주 처지에서 입주를 꺼리는 게 문제다.

정부가 인수위 사무실 예비후보를 정했다 하더라도 당선인 측에서 다른 공간을 요구하면 새 장소를 탐색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제민주화·사회통합 등 산적

■ 박근혜 당선자의 과제

박근혜 당선자가 19일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집권 초기부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강 리더십의 동시 교체로 한반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 김정정은 3대 세습정권과 맞서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아려는 것이 새 정부가 맞닥뜨린 대의 환경이다.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 등 국민

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화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시대'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의회정치의 무력화, 인사와 민주적 소통의 실패 등 '공공성' 합계투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 김정정은 3대 세습정권과 맞서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아려는 것이 새 정부가 맞닥뜨린 대의 환경이다.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 등 국민

일관 주장했던 것은 '민생'이었다. 극심한 사회의 양극화로 고단해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으로 표심을 요절한 것이다.

박 당선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에의 강렬한 열망을 등에 업고 정권 초 강령한 민생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기간 그의 공약 역사 재정수요를 넘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구현은 결국 격렬한 진통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박근혜 시대'의 또 다른 숙제는 우리 사회의 대통합이다. '양김(兩金)시대' 이후 풀이 관 지역주의의 잔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이명박 시대를 거치면서 각 진영 간 갈등의 양상은 한층 얽히고 설켜 형국이다.

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사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호남인재를 고무 등용하면서 국민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박 당선자는 '정치쇄신'을 추진해야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이 내놓은 중앙당의 공천권 축소와 국회의원 면직 특권 제한,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은 그 자체로 혁신적인 정치개혁 방안들로 평가받는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코이카는 1991년 설립되어 우리정부의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도국에 총 80여개의 병원 및 보건소, 170여개의 학교, 40여개의 직업훈련원을 짓고, 농어촌개발, 전자정부, 발전소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해외봉사단 활동수기집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라하, 탄자니아에 빠지다
꼬호마더, 스리랑카?

WFK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 개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World Friends Korea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외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해외봉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시 2012. 12. 22(토) / 10:00 ~ 12:00
장소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YMCA 무진관 (광주 동구 금남로1가 19번지)
문의 www.kov.koica.go.kr / 1588-0434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상담센터)
주최 KOICA(한국국제협력단)

빛의만평

- 김중두

아부지! 나, 당선 머졌다
장하다 내 딸!

18대 대통령
박근혜

제일 먼저 안기고 싶겠다